사설

전공교육의 시작,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공기초·필수 과목은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전공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이다.

또 향후 4년간 이어질 전공교육의 토대로서 단순한 입문 과목을 넘어 학과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전공기초·필수 과목을 누가 가르치는가는 대학이 교육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주보가 지난 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29개 가운데 437개(25.3%)를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전임교원이 맡은 학과가 있는 반면, 상당수를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대비 강사 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 왔다.

강사의 강의가 전임교원의 강의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교원 차이에 따른 개별 강의의 우열보다도 전임교원이 저학년 전공교육을 담당할 때 확보되는 교육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있다. 입학부터 졸업하기까지 학과의 교육과정 전체를 꿰고, 학생들이 전공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전임교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강사가 맡는 전공기초·필수 과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강의 하나하나의 질과 별개로 학생과 학과를 잇는 교육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다.

취재 결과 강사 담당 강의가 늘어나는 배경은 여러 가지다. 전임교원의 정년퇴직과 연구년으로 생기는 공백, 수강 인원에 따른 분반 확대, 새롭게 생기는 융합전공과 교육사업 등 신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과마다 처한 여건은 다르다. 또 일부 계열의 실기와 실무 중심 교육에서는 오히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었다. 모든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전임교원이 맡기에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책임이 뒷전이 될 때다. 본부 역시 학부 전공교육은 전임교원이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학과별 특성과 교육 여건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마저 흐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학과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한 핵심 전공과목만큼은 전임교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교는 학과별 운영 여건을 면밀히 살펴, 전임교원 충원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공교육이 취약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전공교육이다. 학과마다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학과의 정체성이 담긴 핵심 전공수업에서만큼은 현실적 제약보다 교육의 책임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그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모호한 한국어강사 신분

직원도 교원도 아닌…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지난 2월부터 국제교육원 노사 갈등을 취재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노사 갈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취재를 마치고 마음에 남은 건 씁쓸함이다.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대학의 행정 직원도 총장도 아니다. 매일 교실에서 눈을 맞추며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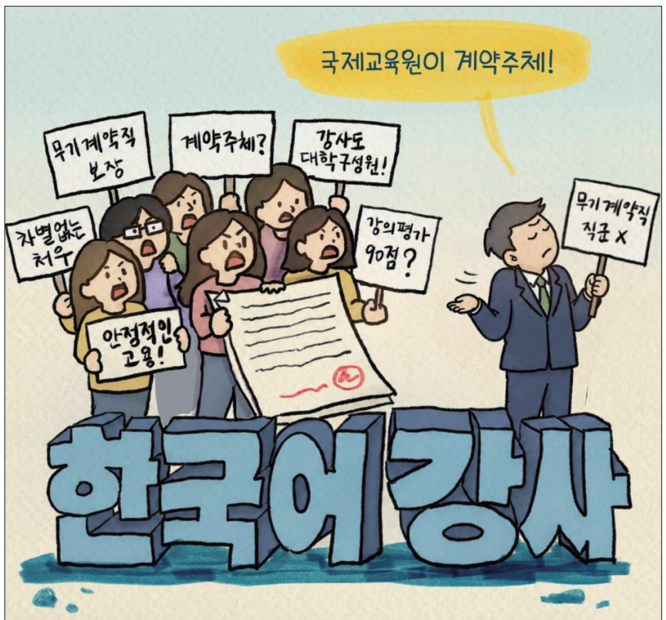
이들이 가르치는 건 언어만이 아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의 외로움을 달래고 학업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보호자이자 버팀목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원도 직원도 아닌 모호한 신분 탓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곧바로 생계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이기 때문이다. 휴가 시 대체 강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강의 시간 외 노동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현실은 이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물론 인사 규정의 한계와 유학생 수 감소라는 학교 측 설명도 주의 깊게 들을 말이다. 하지만 대학이 필요에 의해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유학생을 현장에서 지탱하는 이들을 방치해서는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요구는 경제적 요구라는 1차적인 목적을 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외국인 학생을 책임지고 싶다는 호소로도 들린다.

너무 오랫동안 갈등을 방치해왔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이든 비정상적인 인력 관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기왕에 불거진 갈등이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지 않기를 기대한다. 어쨌든 그들은 유학생이 처음 대면하는 한국에서의 첫 선생님이 아닌가.



만평 끝나지 않는 갈등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세시봉

청소년 SNS 규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정부가 SNS 연령 제한 입법에 나선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기능을 규제하겠단 계획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금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3,300만 달러(약 487억 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 역시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SNS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SNS 환경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무법지대다.

허위 정보 또는 맥락을 무시한 뉴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정치인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은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또한 화면을 내리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무한 스크롤'은 이용자를 중독에 빠지게 한다. 성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내리며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다가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매일 오랜 시간을 그 속에 살게 된다면 성인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정부가 규제하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성장기를 돌아보면 어른들은 종종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며 이해할 수 없는 훈육을 했다. 지금에서야 정말 날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유해한 환경에 청소년을 아무런 거름망 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다만 연령을 제한해도 우회 수단이 존재하기에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호주에선 2025년부터 약 470만 개의 계정이 차단됐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꼴로 접속 중이다. 정부는 입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